

정부, 에너지 등 美 협력 강화... 관세 시기·수준 조율 가능성

안덕근 장관, 美 상무장관 등 회동 동맹 관계 기반 아웃리치 집중 전개 '민감국가 지정' 확답 얻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 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 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사측생 이재용 회장...서 계속

韓 고용률 69.5% '사상 최고'... OECD 평균에는 못 미쳐

지난해 69.5% 집계... 정상케도 올라 20·40대 노동인구 취업은 지속 감소

지난해 국내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상화 속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임에도, 우리나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용률 평균을 여전히 밑돌았다.

23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고용률 부문에서 한국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률은 지난 2019년에 66.8%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5.9%까지 미끄러졌다. 이후 2021년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모습. /뉴시스

66.5%, 2022년 68.5%, 2023년 69.2% 등으로 회복 추이를 보여 왔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해 산술적으로는 일단 정상 케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월별로 발표해 온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초년생' 20대와

'경제 허리' 40대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엔 올랐다"라는 정부 측 분석도 나오는 반면, 주요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임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37개국(총 38개 OECD 회원국 중 영국 미집계)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아울러 작년에도 역시 OECD 평균(70.2%)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이 79.4%로 4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일본보다 위에 자리한 나라는 아이슬란드(85.3%), 네덜란드(82.3%), 스위스(80.4%) 등 3개국뿐이다. 우리는 동유럽의 체코(75.4%), 헝가리(75.1%), 슬로베니아(73.2%), 폴란드(72.5%) 보다 낮다. 에스토니아(75.7%), 리투아니아(73.6%), 라트비아(71.2%)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 밖에 독일 77.4%, 덴마크 77.2%, 호주 77.1%, 스웨덴 76.7%, 캐나다 74.7%, 아일랜드 74.5%, 오스트리아 74.1%, 포르투갈 72.8%, 미국 71.9% 등이다.

연령대 범위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좁혀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로 더 처진다. 우리는 78.4%, OECD 평균은 80.1%였다. 일본은 무려 87.3%를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의 고용률은 하위권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층(29세 이하)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또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9세 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장중심 글로벌 경영 차세대 전장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2012년 이후 30조원 넘게 투자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도 제조시설을 짓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는 현지 당국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돌과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경쟁사인 샤오미의 레이 회장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중국 매체 신광과학기술 등은 이 회장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웰컴 회장이 전남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레이 쉐안미 CEO와 린빈 부회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만남은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62억 달러(약 111조원)에 달했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 1152억 달러(약 16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고사양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올해 69억달러(약 10조원)에서 연평균 9% 성장해 2031년에는 129억달러(약 18조 70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과 레이 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샤오미의 미래 사업 협력이 강화된다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업 수익성 악화 지속... 부실확률 역대 최고

5년새 건설업 부실확률 3.3%→6.1%

최근 6년간 자산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발표한 '기업부실예측분석을 통한 2024년 부실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7510곳 중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부실기업 수뿐 아니라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에는 2508곳(7.9%), 2020년 3077곳(9.2%), 2021년 4012곳(11.2%), 2022년 3856곳(10.8%), 2023년 4350곳(11.6%)이었다.

한경협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

단했다.

개별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부실확률도 2019년 5.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2%로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 부실확률은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4.0%)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이 2.8%로 가장 낮았고 도소매업(4.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4.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7%) 등 순이었다.

/양성윤 기자 ysw@